

'9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향후 경제전망

序



沈 永 燮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 말 이래 IMF의 시련기를 겪는 동안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는 경제성장세의 회복과 경제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작업이었다. 다행히 20여 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는 되살아나고 있고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작업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외환위기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한숨을 돌린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현상을 점검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금년들어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상반기 중에는 7% 이상의 예상 밖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직은 지난 해의 부진에서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비상시국을 벗어나 정상궤도로 들어서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 압력과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인플레이 없이 이처럼 강한 경기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하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해에 2%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금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아직 IMF의 실업인구를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경기는 어떻

■ 目 次 ■

- 序
- I. 최근 경제동향
- II. 하반기 및 2000년 경제
전망
- III.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
- IV. 맺음말

게 될 것인지도 궁금한 일이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면서 내년 이후의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불거져 나온 금융불안현상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고 있었던 바,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1997년의 현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신중하고도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시장체제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성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제도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경제개혁의 틀 속에서 동시에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작업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과제는 경제성장세의 회복과 원활한 경제구조조정작업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안은 그러나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경제의 구조조정작업이 성공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체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구조조정작업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의 움직임과 구조조정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의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최근 경제동향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완전한 회복세를 나

타내고 있다. GDP 성장률이 금년 1/4분기에 4.6%를 기록하더니, 2/4분기에는 무려 9.8%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7.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가을에만 하여도 1999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는 산업연구원 등이 그나마 금년의 성장률이 2%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자 너무 낙관적이고 성급한 전망이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로 경기의 앞날이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무색하리만큼 우리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에는 GDP 성장률이 -5.8%를 기록했었으니 경기의 반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실제로는 1996년 중반 이후 34개월만에 불황을 탈출하는 것이니 경기의 대반전이라고 할 만도 하다. 제반정황과 통계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작년 10월경에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세로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이래 우리 경제는 평균 18개월의 경기위축기를 겪곤 했으나, 이번에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평균치보다 긴 불황의 터널을 거쳤은 것이다. 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속도가 빨라져 실업자수가 올 들어 지난 2월에는 178만 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8.7%에 달하였으나, 6월에는 실업자수가 135만 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률도 6.2%로 감소되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의 감소세는 7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해 보면 금년 가을에는 실업자 수가 120만명대로, 실업률은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아직 20만명 이상의 IMF 실업자들이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의 수도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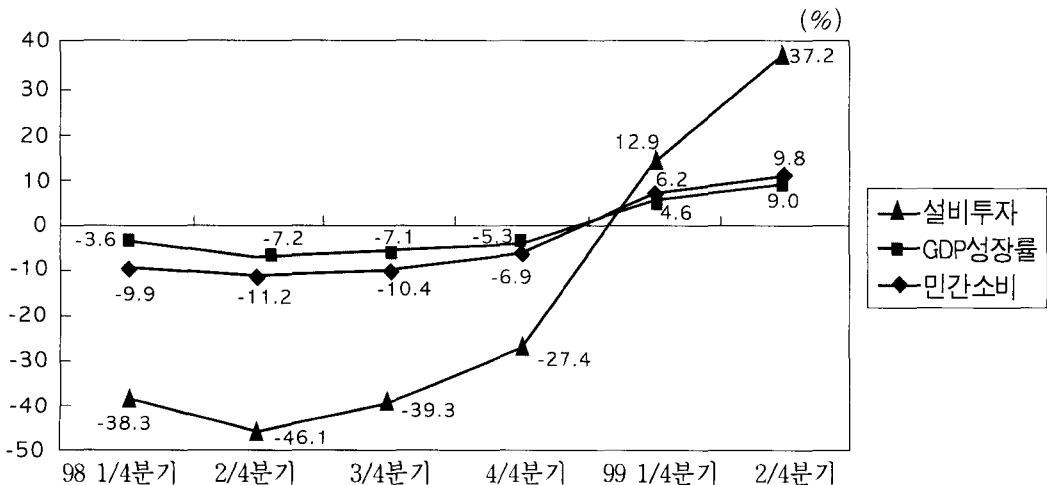
어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빠르게 회복된 데다, 수출도 신장세가 확대된 데에서 기인한다. 지난 해에 IMF 쇼크로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금년들어 그동안 유보된 소비지출이 확대된 데 힘입어 비교적 큰 폭으로 회복되었다. 주로 자동차, PC, 가구 및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내구재에 대한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민간소비지출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7.6%나 늘어난 것이다. 설비투자도 지난 해에 소진된 재고투자뿐 아니라 무선통신장비와 반도체, 운수장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상반기 중 무려 24.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작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반기에 전년대비 -42.4%로 감소하였고, 연간으로도 -38.5%를 기록했었다. 한편 지난 해에 극심한 투자부진을 경험했던 건설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 상반기 중에 -10.8%의 건설투자 증가율로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토목,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활발하였으나,

건축건설이 계속 부진하였던 탓이다. 다만 감소세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향후의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산면에서는 제조업의 회복이 괄목할 만 하고, 서비스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의 대내외 수요호조로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대폭 확대되었고, 경공업 생산도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상반기 중에 지난 해에 비해 15.5%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통신업이 계속 호조를 보인 데다, 도소매업 및 증권업 등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기계류 등의 제품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상반기 중에 물량기준으로 18.8%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11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물가추이를 보면 지난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0.6% 상승에 그쳐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의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공식적으로 추계한 이래 반기기준으로는 사상 최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 한다. 소비자

[그림] 성장률·설비투자·소비지표



물가는 7월까지도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8월 이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 국제원유가의 상승 여파 등으로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물가는 상반기 중에 오히려 3.2% 하락하였고, 이같은 추세는 7, 8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하나,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 압력이 가시화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인플레이 압력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의 빠른 경기회복은 비교시점인 지난 해의 급속한 경기위축에 대한 반동의 의미가 클 뿐 아직까지는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금년 상반기에 취업자와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IMF이전 수준에는 아직도 미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상반기의 경기회복속도는 그동안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서 결코 이를 과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비상시국을 벗어나 막 정상궤도로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가 안정할 수 있는 정상궤도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의 경제전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일이다.

II. 하반기 및 2000년 경제전망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높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금년 하반기의 성장률을 8~9%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 등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의 성장률이 이미 7.3%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성장률이 8%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의 경제성장은 설비투자와 수출에 의해 견인되고, 특히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증가로 미루어 볼 때 상반기의 증가율 24.8%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에는 정보통신부문과 운수장비부문이 설비투자를 주도했으나, 하반기에는 전업종으로 확산되면서 기술개발과 기계류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폭이 상반기의 -10.8%보다 크게 둔화되거나 조만간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대우사태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엔화 강세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연간으로는 작년 수준인 1,36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 등으로 인해 연간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가 지난 해의 39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떨어진 230~240억 달러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지난 해에 405억 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흑자 규모도 따라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물가는 급격한 경기상승세와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국제원유가의 상승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잠재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계정상 총공급능력이 아직까지는 총수요를 능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압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는 대우사태로 인한 시장불안과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로 금리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시경제지표로만 보면 금년 하반기의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한다면 비교적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도의 경기연착륙 여부이다. 금년이야 어차피 작년 한해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을 반전시키는 의미의 고성장이 가능했고 불황의 터널 끝이라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경제가 금년 중에 정상궤도로 들어섰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경제가 IMF의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 잠재성장률이 2%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실제로 실현된 성장률이 금년처럼 잠재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면 조만간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져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80년대에 7.7~8.4%, 90년대 초반에 7.2~7.8%, 90년대 중반에 7.1~7.2%로 차츰 낮아지기는 했으나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선 1996년에 6.8%, 1997년에 6%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으며, 지난해에 IMF 위기를 겪으면서 연쇄부도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데다 설비투자가 저조했던 게 잠재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내린 주된 원인이 되었다. 물론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2%대의 잠재성장률은 IMF 위기의 터널을 지났던 지난해의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서 우리 경제의 장기 추이를 정확하고도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내년도의 경기를 전망하는 일은 작년 이맘 때 1999년의 경기를 전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경제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상승 압력은 커지며,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며 실업자를 흡수하는 일자리의 창출속도도 그만큼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금리상승세로 인해 내수주도 경기회복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이 투자비용 부담의 증가로 연결된다면 현재와 같은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리의 안정이 내년 경기를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급속한 내수회복으로 경상수지흑자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내수주도의 성장지속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내년에는 그동안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과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업경영이 수익성 위주로 전환되면 설비투자와 고용증가세도 예전과 같지 않고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금년에 이미 상당수의 경제지표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통계적 반등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년에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각종 경제지표의 비교대상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 경제지표의 비교대상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내년에 경제가 금년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거시경제지표가 내년이 금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의 우수한 금융기관이나 전망기관의 예상치들도 한결같이 금년만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표> 참조)

문제는 금년의 경기와 내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을 우리 경제의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경기변동으로만 본다면 작년과 금년의 모습은 모두 예외로 치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IMF 위기가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던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경기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예외이고, 금년도의 고성장은 성장잠재력보다는 지난 해의 예외적인 불황에 대한 반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외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기움직임의 귀추에 주목해야 된다. 내년도 경기가 연착륙에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는 당분간 순항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지만 내년도 경기가 큰 폭으로 출렁거리거나 불안해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향후의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

우리 경제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하였던 작년에는 물론이고 금년 상반기에도 일각에서는 경기부양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막상 금년 상반기에 예상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표> 주요 기관의 국내경제전망(99-2000년)

(단위 : %, 억 달러)

	GDP		가계소비		고정투자		소비자 물가		총동화		경상수지		회사채 수익률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Goldman Sachs Asia	7.0	5.0	6.3	4.5	0.1	3.1	1.1	2.2	21.0	9.6	208	181	-	-
HSBC Economics	6.0	5.0	6.3	4.9	-2.7	5.7	1.5	3.0	12.0	10.0	178	107	7.5	8.5
ING Bearings	6.0	5.2	5.3	4.5	8.2	9.2	1.6	3.5	-	-	215	134	8.5	9.3
Dresdner Bank	5.0	3.8	4.5	4.0	1.8	5.5	2.0	3.5	23.0	18.0	-	-	8.8	9.2
Morgan Stanley Asia	4.8	4.9	5.8	6.0	-2.1	6.5	2.0	2.0	-	-	203	107	8.5	8.5
Econ Intelligence Unit	4.0	4.9	6.0	5.2	-5.6	4.5	1.3	2.0	9.6	10.1	192	77	-	-
Consensus(Mean)	5.8	4.9	5.9	5.2	0.5	5.5	1.7	3.0	0.5	4.3	20.2	12.0	8.5	9.0
ADB(Q2 '99)	2.0	4.0	-	-	-	-	2.0	3.0	-	-	-	-	-	-
IMF(Apr. '99)	2.0	4.6	-	-	-	-	1.8	3.0	-	-	250	120	-	-
OECD(May '99)	4.5	4.3	2.5	3.2	-3.9	3.0	-	-	-	-	-	-	-	-

주 : 1) 경상수지는 억 달러, 여타 지표는 전년동기대비 % 증가율

자료 : Asia Pacific consensus Forecasts 1999.7.12, 대우경제연구소 자료에서 재인용

되자 이번에는 성장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하에서 정책당국이나 일부 학자그룹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이후에는 경기과열론을 부추겨 시장의 자율반등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제 또 다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지 않고 시장을 전망하는 뉘를 범하기보다는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만일 여건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금년 상반기의 재고투자 증가, 하반기로 이어질 설비투자 증가, 내년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건설투자 증가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경제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는 경기의 조절이 아니라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개혁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개혁이 앞으로도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성장의 잠재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융시장의 불안제거와 저금리 기조의 정착 또한 시장체제의 완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과거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허약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를 막론하고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였다. 경기가 나쁠 때에는 언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지가 막연한 채 불투명하기만 하였고,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언제 또다시 불황이 몰려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의 경기변동기마다 수없이 겪어 온 터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 제일의

과제는 경제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MF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하는 일로서, 정부도 금년 하반기의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구축작업을 제일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의 확립,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등을 하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바 있지만, 경제의 구조개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혁작업은 정책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 하겠다.

금융 및 기업부문,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개월 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2년 가까이 경제개혁작업이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개혁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이를 지속하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운영에 있어 쉬운 선택이 아니다. 외국의 경제개혁작업 가운데 성공했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결코 긴 기간이 아니지만 과거 우리가 시도했던 수많은 개혁작업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없는 힘든 작업이다. 개혁기간 중에 경제의 각 주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경제의 구조개혁작업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개발년대 이래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제규범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진 우리만의 제도와 관행을 고집스럽게 운영해 온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우리 경제가 수십 년에 걸쳐 자본주의적인 발전양식을 채

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가 되는 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IMF 이전만 해도 우등생인줄 알았던 우리 경제는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소홀했던 탓에 하루아침에 IMF의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국제적인 문제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가 또다시 강력한 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구조개혁의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BIS비율을 제고하는 등 건전은행(clean bank)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을 구축하고 금융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BIS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구조조정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5대 원칙이라 함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을 말한다.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5대 계열의 경우 8개 업종의 자율적 사업교환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중심으로, 6대 이하 계열은 채권 금융기관 주도 하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은 억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매각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금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도록 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려는 것도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으로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N. 맺음말

경제구조개혁의 성패는 되살아나는 경기의 연착륙을 보장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좌우할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제일의 과제이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하여온 구조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개혁내용을 소프트웨어 부문으로까지 확대하여 내실을 기할 작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노력이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개혁작업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같이 적용되는 왕도나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들의 경제개혁 성과와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마다 특성에 맞춘 개혁작업을 일관성있게 끌여가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긴요하고도 절실한 경제구조개혁 작업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단숨에 이루어질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과제가 어려운 만큼 계획도 치밀하여야 하고, 제도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소프트웨어도 바꾸어나가야 하는 등 구조개혁의 앞날은 멀기만 한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이 한계가 있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제의 구조개혁작업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기혁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와 단계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제 구조개혁을 제일의 과제로 삼으면서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주체들의 개혁의지를 북돋우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의 구조개혁은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의식의 개혁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IMF 위기 이후에 진행된 우리 경제의 개혁노력은 기존에 마련된 제도 하에서 정책시행을 원칙에 맞게 강화한 것,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 등 제도에 입각한 개혁뿐 아니라 제도에 앞서 정책운용의 차원에서 과거의 직폐를 시정하는 초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조개혁작업이 그동안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에 직면하여 국민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감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작업이 상당한 진

척을 보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바, 아무래도 개혁의 제도적인 완성과 더불어 의식개혁의 수반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우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쳐본들 우리의 의식이 구태의연하면 개혁의 의의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성과를 중시하고,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경영풍토를 조성하며, 그룹 전체의 집단연대에 의지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이익을 우선하는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잡고 나서야 비로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구조개혁의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이를 통해서 경제의 재도약을 기하자는 것인 만큼, 개혁 이후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만한 경쟁력 창출의 원천을 발굴하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개혁이 완성된 이후의 우리 경제는 산업의 모습이나, 사회구조, 시장경쟁의 제도, 인력, 기업구성 등의 모든 면에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새로운 제도에의 적응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기업 및 산업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는 인력 및 기술개발과 자본형성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일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개혁 이후의 과제이다. 정부의 향후 정책운용이 단순히 경제구조의 개혁작업에만 매달리거나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